

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

“국민 공감대…추석 이전 완수할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즉시가동한다고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3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각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하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 대표 경선에서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을 비롯한 ‘강력한 개혁 당 대표’

를 구호로 내건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도 이를 거듭 천명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강력한 개혁,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으로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몸 공동체가 되겠다”며 “‘원팀 당·정·대’가 하나 돼 회복과 성장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경제의 회복이 국민의 삶 속에 체감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 국익

정 대표는 이날 호남, 충북 등지의 호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드린다.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도지사가 4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성공 개최 및 아세안 지역 교류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한-아세안센터 남도미식박람회 성공 맞손

아세안 10개국 공식 참여 확정…교류증진 등 업무협약

전남도는 4일 도청 접견실에서 한-아세안센터와 함께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아세안 지역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람회에 아세안 10개국이 공식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관광, 무역, 투자,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공동협력 △교류 활성화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상호 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긴밀히 협조한다.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10개 국가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력을 견인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그동안 문화·관광 분야에서 아세안 음식 축제(ASEAN Culinary Festival), 파빌리온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아세안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파빌리온(ASEAN Pavilion)이 박람회 행사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아세안 파빌리온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음식 행사가 전남도에서 처음 재개돼 그 의미를 더한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첨단3지구 에너지 자립산단 조성 궤도

광주도시공사, 일반수소발전시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광주 첨단3지구 에너지 자립산단 조성 이 궤도에 올랐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의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과 탑승러워 컨소시엄과 협약해 추진한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2025년 일반 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첨단3지구 산업단지 내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해 산업단지 내에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산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전기화합 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여겨진다. 첨단3지구 산업단지에 1단계로 9.68MW와 8.8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2개소를 건설하며, 2027년 준공 후 20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142GWh로, 이는 광주 시민 약 4만 8천여 가구가 동시에 전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며, 첨단3지구 내 공동주택의 열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펀드를 조성해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융 모델을 만든다. 양동민 기자

국가지원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구감소지역 보조금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

AI교과서 ‘교육자료’ 변경…교교 무상교육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방송 3법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를 법안을 의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또 법률 목적에도 기존 지

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전행 방해)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5일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이들 법안 가운데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개최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쟁점법안들의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으로 바뀌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5일 방송 3법 가운데 1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오는 21일경부터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GGM 캐스퍼 활용 AI 운전자 보조시스템 개발

시, 산업부 공모…교통약자 스마트카 개발 선정

광주시가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운전자 보조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광주시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약자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사업(스마트카)’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GGM에서 생산 중인 소형 전 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AI 기반 맞춤형 교통안전 및 편의 기술을 개발해 실증·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 운전자들의 인지적 한계와 상황 대응의 어려움을 보완, 주행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며, 총 101억9000만원(국비 70억원, 민자 31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교통약자 주행패턴 분석을 위한 내·외부 인지센서 융합 및 모

듈 개발, 맞춤형 음성·사용자 경험(UX) 적용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운전자 도움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평가 검증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이다. 이 사업은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운영 중인 GGM의 캐스퍼 차량을 활용한 상용화를 통해 지역 자동차 제조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판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의 자율주행 핵심부품(인지·제어·통신) 인증평가 및 실증사업과 연계될 경우, 광주시가 미래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미래차산업 선도를 위해 지난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진국 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까지 약 220만평을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받아 2028년까지 총 657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야 의원 106명, 철강산업 위기극복 협력

‘K-스틸법’ 공동발의…대통령이 지휘하는 ‘특위’ 설치

한미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는 기존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내 철강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여야 공동으로 추진돼 벼랑 끝에 선 국내 철강업 회생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의원 106명은 4일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 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